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1. ⑤

① (×) 공탁법 제11조에 의하면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공탁물품의 매각·폐기에 관한 예규 제937호 제3조에 의하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별지서식 제1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공탁물보관자가 법원허가를 얻어 공탁물품을 경매로 매각하려 할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에 따른다.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의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 따라서 매각대금 전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며,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에 대해서는 공탁 이후 별도로 출금청구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공탁규칙 제66조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 따라서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상업등기법 제41조에 의하면 상호가등기를 위한 물취공탁은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그 공탁물은 금전만이 허용될 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행정예규 제1167호 제1호에 의하면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공탁당사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⑤ (○) 공탁선례 제1-17호에 의하면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으며 공탁의 근거법령에서 관할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공탁소는 직무관할 및 공탁물에 의한 관할범위 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무기명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군법원 공탁소를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서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공무에게 공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에게 공탁기관의 지정을 구하여 그 지정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공탁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2. ⑤

① (○) 공탁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기명식(記名式)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공탁선례 제201010-2호에 의하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채권에 대하여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채권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그 가처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채권이 가처분권자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전부권자(갑)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공탁선례 제2-170호에 의하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이고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재판서·재결서 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및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일반적으로 들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실행방법에 대하여 판례 및 실무 입장인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설에 따르면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공탁신청 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할 수는 없다.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공탁선례 제2-200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 하더라도 그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또한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 따라서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3. ①

① (○) 대공탁청구인이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공탁청구서' 및 '유가증권출급의뢰서' 등을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그 대공탁청구서 말미에 영수인을 찍어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출급하여 그 유가증권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을 추심하여 공탁관의 계좌에 대공탁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7다35596)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둘째,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가 있고 이때에는 물론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본래의 공탁물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이나 채권을 공탁하게 할 때에 신규담보물의 액면가액이 절대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이나 채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결 1988.8.11. 88그25)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가 있다. 둘째,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본래의 공탁물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이나 채권을 공탁하게 할 때에 신규담보물의 액면가액이 절대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신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이나 채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행정예규 제936호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공탁자가 착오납입 등을 한 경우 납입 당일에 한해 통상 업무시간 전까지 [별지 2]의 양식에 의해 공탁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공탁금보관자에게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언제라도라는 표현은 납입 당일에 한해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⑤ (×) 대공탁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상환금에 의한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지만 담보물변경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에 금전공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유가증권공탁이 다른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따라서 담보물변경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표현은 유가증권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에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4. ②

① (×) 공탁선례 제2-279호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집행공탁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이라면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각 철회하고 집행법원이 그 집행공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여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 따라서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표현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행정예규 제1308호 제2호 다목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공탁금액의 범위는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따라서 공탁서상 전체 공탁금액이 1,500만원이어서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乙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750만원을 출급청구하는 경우는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옳은 표현이다.

③ (×) 행정예규 제1345호 제12조에 의하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자신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하도록 하거나 공탁물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공탁관을 상대로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라는 표현과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자신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변제공탁에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임으로써 부적법한 공탁이 된 경우에 그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 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판 1986.8.19. 85누280).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변제공탁에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임으로써 부적법한 공탁이 된 경우에 그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이 허용된다. 둘째,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셋째,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 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다. 넷째,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변제공탁의 효력은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⑤ (×)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라도 원래의 공탁물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물수리청구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2호에 의하여 공탁채권자가 공탁을 수락치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채권자의 서면이나 공탁을 유효로 신고한 확정판결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있어야 한다.(대결 1973.12.22. 73마360)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라도 원래의 공탁물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공탁물수리청구에는 공탁채권자가 공탁을 수락치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채권자의 서면이나 공탁을 유효로 신고한 확정판결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래의 공탁물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5. ②

① (×) 공탁관의 심사권에 대해서는 심사의 방법과 심사의 범위를 분리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즉, 심사의 방법은 간이·신속·확실적 처리를 의도하는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정서면인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 등과 그 첨부서면만에 의한 형식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되, 심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탁신청 시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공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해당 계약이 무효라서 공탁에 의하여 면책을 얻고자 하는 채무의 부존재가 일견 명백한 경우에는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다.

=> 첫째, 법정서면인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 등과 그 첨부서면만에 의한 형식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되, 심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둘째, 공탁신청 시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공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해당 계약이 무효라서 공탁에 의하여 면책을 얻고자 하는 채무의 부존재가 일견 명백한 경우에는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첨부서면만에 의한 형식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므로 공탁신청을 불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행정예규 제1167호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이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공탁선례 제2-23호에 의하면 공탁공무원은 조사단계에서 서류에 불비한 점이 있거나 공탁사유 또는 지급사유가 없으면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청구서에 불수리취지를 기재하여 날인하고 그중 한 통과 첨부서류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서면으로써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행정예규 제1167호 제3호 다에 의하면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라는 표현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⑤ (×)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 다목에 의하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인 공탁자로부터 공탁서를 교부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이어서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5,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공탁금 회수청구 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6. ①

① (○)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대판 2002.12.10. 2002다52657 참조).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다.(대판 2002.12.10. 2002다52657)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둘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다. 셋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다.

② (×) 채권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대판 2002.8.27. 2001다71699 참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판 2002.8.27. 2001다71699)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채권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둘째,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셋째,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 넷째,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공탁선례 제2-117호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이행제공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의 수령거부, 수령불능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으면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이 원래의 변제공탁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 따라서 변제공탁사유가 있더라도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등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위 판결에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 위 각 서류 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결 1985.12.28. 85마712)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등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둘째, 판결에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 위 각 서류 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판결은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위 판결을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⑤ (×)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대판 1994.8.26. 93다42276)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둘째,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채권자가 그에 대한 수령을 거절한 이후라는 표현과 바로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7. ③

① (×)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대판 2002.12.10. 2002다52657 참조).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다.(대판 2002.12.10. 2002다52657)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둘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다. 셋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액의 일부 공탁으로 공탁이 무효가 된다는 표현은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공탁선례 제2-117호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이행제공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의 수령거부, 수령불능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으면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이 원래의 변제공탁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 공탁선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이행제공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의 수령거부, 수령불능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으면 공탁할 수 있다. 둘째, 이때의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셋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과는 다르다. 따라서 변제공탁사유가 있으면 공탁할 수 있다는 표현과 변제공탁사유가 있더라도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공탁선례 제2-125호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 전액의 공탁을 의미하므로,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다면 이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자가 대신 지출한 상속등기비용은 별도로 수용보상금채권자들에게 구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상하여야 할 것이다.

=> 선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토지수용법상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 전액의 공탁을 의미한다. 둘째,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다면 이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 셋째, 기업자가 대신 지출한 상속등기비용은 별도로 수용보상금채권자들에게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다면 이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는 표현과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무액의 일부 공탁으로 공탁이 무효가 된다는 표현은 어울리므로 옳은 표현이다.

④ (×)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1.12.10. 91다27594)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둘째, 변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변제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⑤ (×)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갑과 을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갑과 을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6.8.25. 2005다67476)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갑과 을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다. 둘째, 갑과 을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도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8. ④

① (×) 공탁규칙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공탁소에 대한 민법 제489조 제1항의 승인이나 통고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공탁선례 제2-133호에 의하면 변제공탁에서 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고,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공탁관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 첫째, 변제공탁에서 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둘째,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공탁관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셋째,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넷째,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채권자별로 그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하나 공탁원인과 공탁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공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각 채권자가 자기 지분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각 채권자가 채권전액에 대해 출급청구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동일한 금액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 중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가장 다액으로 확정된 금액 상당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그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07.5.31. 2007다3391)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동일한 금액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둘째, 채권자들의 청구금액 중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가장 다액으로 확정된 금액 상당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그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다. 셋째,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다.

⑤ (×) ②에서 본 바,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따라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9. ④

① (×) 채권자가 단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때에는, 그 공탁금 수령으로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한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그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1996.7.26. 96다 14616)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채권자가 단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다. 둘째, 그 공탁금 수령으로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셋째,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한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그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의유보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의 효과는 발생한다는 표현은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이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공탁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14.5.29. 2013다212295)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셋째,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공탁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공탁선례 제202307-2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서면이나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비실명 처리되어 기재되고 상속인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 동일인 증명서는 비실명 처리된 형사공탁의 피공탁자가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점,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동일인 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른 신속한 처리가 요청된다는 점, 그리고 상속인에 대한 심사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단계 보다는 공탁금 출급단계에서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는 형사공탁 후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

=> 선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둘째,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는 형사공탁 후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 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종전의 수령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은 마찬가지이며, 공탁금 수령 당시 이의 신청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대판 [전합] 1982.11.9. 82누197)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다. 둘째,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셋째,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 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종전의 수령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넷째, 공탁금 수령 당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10.29. 2008다51359)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한다. 둘째,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셋째,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명시적인 유보의 의사표시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10. ③

① (×) 행정예규 제1345호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2.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행정예규 제1345호 제5조 제2항 제1호 사유이어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 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재결수용시기 이후에야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인가결정이 있었다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위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그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 시나 원재결수용시기에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공탁은 원재결대로의 보상금

지급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실효된 원판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또한 위법하여 무효이다.(대판 1986.8.19. 85누280)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둘째,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가결정 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다. 셋째,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재결수용시기 이후에야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인가결정이 있었다. 다섯째,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위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그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 시나 원재결수용시기에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공탁은 원재결대로의 보상금지급의 효력이 없다. 여섯째, 원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일곱째, 실효된 원판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또한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의무가 없는 반대조건을 붙여 무효가 된 공탁을 수용개시일 이후에 반대급부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면 그 공탁이 유효하게 되므로 재결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표현과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96.9.20. 95다17373)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둘째,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구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몰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3.7.11. 2001다83777)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둘째,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셋째,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몰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몰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는 표현과 몰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⑤ (×) 공탁선례 제2-242호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업자 등은 수용대상 토지가 부채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이고 그 보상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와 같은 토지수용의 채권보상 요건을 충족하고, 위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유가증권 공탁의 공탁물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토지수용법상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압류의 경합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탁물 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선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업자 등은 수용대상 토지가 부채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이고 그 보상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둘째, 토지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와 같은 토지수용의 채권보상 요건을 충족하고, 위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공탁사유가 있다면 유가증권 공탁의 공탁물 적격을 갖는다. 셋째, 토지수용법상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탁물 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보상금채권은 유가증권 공탁의 공탁물 적격을 갖지 못한다는 표현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탁물 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11. ②

① (×) 행정예규 제1345호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등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수용의 효과로 소멸되는 것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첫째, 수용대상토지등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다. 둘째,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수용의 효과로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그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판 2007.2.9. 2006다68650·68667)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다. 둘째,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셋째, 동일성 등에 관하여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다. 넷째,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섯째,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공탁선례 제2-247호에 의하면 이 건 질의와 같이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이 부적법하여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공탁자인 기업자는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회수청구서에 위 확정판결 외에 수용된 토지의 등기부상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첫째,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이 부적법하여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둘째, 공탁자인 기업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셋째,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회수청구서에 위 확정판결 외에 수용된 토지의 등기부상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수용대상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표현은 등기부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기업자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공무원은 기업자 자신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도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다. (대결 1988.4.8. 88마201)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기업자의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둘째,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셋째, 공탁공무원은 기업자 자신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도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도 인정된다는 표현은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

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⑤ (×)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갑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갑 한 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결 1989.12.1. 89마821)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둘째, 갑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갑 한 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공탁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한 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12. ④

① (×)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나, 그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인바,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결 2004.7.5. 2004마177)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둘째, 그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넷째, 위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따라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라는 표현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2.10.20. 92마728)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둘째,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셋째, 그 담보적 효력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표현은 그 담보적 효력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결[전합] 1999.12.3. 99마2078)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 둘째,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셋째,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넷째,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

일지라도 담보사유는 소멸한다는 표현은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가처분명령 자체를 취소하여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3조에 의하여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판 1998.5.15. 97다58316)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가처분명령 자체를 취소하여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둘째, 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다.

⑤ (×) 행정예규 제952호 제4호 나목에 의하면 공탁관은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 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에,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첫째, 공탁관은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 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출급청구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둘째,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담보권 실행의 신청을 할 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므로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13. ③

①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8.5.15. 2006다74693)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둘째,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들(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거나,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가 동시에 도달하여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도 공탁사실통지를 하여야 한다.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 첫째,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진다. 둘째, 혼합공탁은 피공탁자들(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셋째, 공탁신청 시에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넷째,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거나,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가 동시에 도달하여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도 공탁사실통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판 2008.5.15.

2006다74693)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둘째,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다. 셋째,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도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2008.5.15. 2006다74693)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둘째,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면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따라서 압류경합에 해당하므로 乙은 1,0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다.

14. ⑤

① (○) 제3채무자는 채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 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5.7.9. 2013다60982)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제3채무자는 채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 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셋째,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넷째,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행정예규 제1018호 제5호 나목에 의하면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예규를 이해해 본다. 첫째,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되었다. 둘째,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행정예규 제1018호 제4호 다목(2)에 의하면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행정예규 제1225호 제1호 나목(1)에 의하면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판 2014.7.24. 2012다91385)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라든가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15. ⑤

① (○) 공탁선례 제2-351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단일 또는 복수의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 후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선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단일 또는 복수의 채권가압류가 있다. 둘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셋째, 민사집행법 시행 후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행정예규 제1060호 제3호 나목에 의하면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 시 압류결정문 사본(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채권압류통지서 사본(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사실 및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예규를 이해해 본다. 첫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둘째,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넷째,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 시 압류결정문 사본 및 채권압류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사실 및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③ (○)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같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결 1996.11.11. 95마252).

④ (○)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갑)는 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가압류채권자(갑)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금화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공탁선례 제2-295호)

⑤ (×)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가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금청구할 수 있다.

16. ④

① (○) 가압류채권자(갑)의 채권자(병)가 ‘가압류채권자(갑)의 가압류채무자(을)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행사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으므로,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 제1-225호)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② (○) 재판예규 제1849호[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채민 제2004-4호)] 제11조의5(개인회생공탁 등)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 회생위원은 공탁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 판례를 이해해 본다.

③ (○)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출금청구할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이 있으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채무자)가 갖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며, 가압류채권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현금화명령을 얻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공탁금 출금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공탁서의 피공탁자란도 공란으로 둔다) 위의 압류 및 전부명령들은 그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하거나 형식상 전부명령이 확정된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제2-297호)

④ (×)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대결[전합] 1996.10.1. 96마162).

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종료 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17. ②

① (○) 채권양도(효력다툼 있음)가 선행하고 채권압류가 후행한 경우,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다.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지만,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나 압류, 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② (×)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는 없다(대판 2005.5.26. 2003다12311).

=> 판례를 이해해 본다.

③ (○)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제8조에 따른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음을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합공탁이 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7조 제2항)

④ (○)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01103-3호).

⑤ (○)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8.1.17. 2006다 56015).

18. ③

① (○) 공탁선례 제2-325호에 의하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갑 또는 가처분권자 을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들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그 확정판결과 채권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선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갑 또는 가처분권자 을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둘째, 가처분권자들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그 확정판결과 채권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피고인은 공탁된 금액 중 추정금액을 넘는 초과액에 대하여 별도의 추정보전명령의 취소를 받지 않더라도 공탁서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회수할 수 있다.(대결 2010.4.29. 2010초기282)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이 판례는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다. 이 판례는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재심'에 관한 것이다. '감치'란 법정 질서 유지나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부과하는 제재로, 감치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을 다루는 것이다. 첫째, 피고인은 공탁된 금액 중 추정금액을 넘는 초과액에 대하여 별도의 추정보전명령의 취소를 받지 않았다. 둘째, 공탁서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행정예규 제936호 제3호 ③에 의하면 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서는 보관하고 [별지 1]과 같은 납입안내문을 출력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안에 등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탁물보관자로부터라는, 공탁자에게 교부하여야라는 표현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라는, 공탁서는 보관하고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 제2항,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공탁사유신고서에 첨부되는 공탁서는 몰수보전이 된 후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사유로 공탁한 경우에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사유로 공탁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공탁규칙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공탁법」 제11조에 따라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19. ①

① (×) 행정예규 제1225호 2. 나. (3)에 의하면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하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예규를 이해해 본다. 첫째,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다. 둘째, 당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기 전이라도라는 표현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등으로 사유신고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제3채무자와는 달리 공탁관은 공탁을 지속하면서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추심채권자 등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2002.8.27. 2001다73107)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경우의 세부절차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직무상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대판 2002.8.27. 2001다73107)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등으로 사유신고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둘째, 일반 제3채무자와는 달리 공탁관은 공탁을 지속하면서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추심채권자 등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이는 직무상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공탁선례 제2-354호에 의하면 제1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제2, 제3채권자가 동일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를 하였을 때에는 청구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압류의 경합)[현 민사집행법 제235조(註)]에 의하여 채권이 경합된 상태이므로, 제2, 제3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후일 선행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부활하지 않으므로(대판 1965.5.18. 65다336 참조), 제3채무자인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81조[현 민사집행법 제248조(註)] 각 항 및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현 공탁규칙 제58조(註)]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다음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위 공탁금을 각 채권자에게 분할지급하여야 한다.

=> 첫째, 제1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제2, 제3채권자가 동일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를 하였다. 둘째, 청구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압류의 경합)[현 민사집행법 제235조(註)]에 의하여 채권이 경합된 상태이다. 셋째, 제2, 제3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넷째, 후일 선행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부활하지 않는다. 다섯째, 제3채무자인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81조[현 민사집행법 제248조(註)] 각 항 및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현 공탁규칙 제58조(註)]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다음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위 공탁금을 각 채권자에게 분할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행정예규 제779호 2. 나. (2)에 의하면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행정예규 제779호 1.에 의하면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 첫째, 변제공탁에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둘째, 그렇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셋째,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20. ①

① (×)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결 2001.6.5. 2000마2605)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

【시대에듀 법무사 1차 공탁법 30문 해설】

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였다. 둘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된다. 셋째, 이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따라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행정예규 제1354호 제15조 제2호에 의하면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는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14조 제3항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청구인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해당 공탁금 보관은행(취급지점)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제10조가 정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4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대결 1999.6.18. 99마1348)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한다. 둘째,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제10조가 정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4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는 그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해당 공탁에 대한 압류채권자, 양수인, 일반승계인 등을 말하며 단지 압류하려고 하는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의 채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행정예규 제948호 2. 라. (2)에 의하면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한편 행정예규 제948호 2. 라. (3)에 의하면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